

공약 이행 촉진법



정치법제위원회

목차

실태

제정안

개정안

우수
사례

01
실태

[국외의원 공약 이행 문식] 공약 쏟아낼 뻔 언서
고... 의원 76명 이행정보 공개 거부

"당선 되고 보자" 뜬구름 잡는 공약 뒷감당 못해

10%대 불과한 공약 이행

2011-07-26 [10:49:00] | 수정시간: 2011-07-26 [17:10:01] | 4면

정치
선거

매니페스토 "18대 총선공약 10개 중 6개 이행 안 했다"

이을욱 기자 woody@kyunghyang.com

입력 : 2012-02-07 21:21:58 | 수정 : 2012-02-08 00:49:45

[18대 공약 성적-'공약실천' 분석] 3개중 2개는
'공수표'... 결국 '뺑~' 터져버린 空約

이행완료 35% 그쳐... 291건은 보류·폐기

지역공약 이행 약속한 박근혜 대

지역공약 상당수 경제성 낮아, 재원

국가성장 걸림돌되는 공약남발

경인일보 | webmaster@kyeongin.com

"말만 번지르르" 현역 국회의원 공약 50%도 못 지켜

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, 권경석 70.43%-신성범 16.33%

공직이행촉진법

전례가 없는 새로운 법

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신장하기 위해
발의한 안건

공직선거법 263조에 제정

제263조(공약 이행 촉진법)

본 법안은 4년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적용한다.

① (처벌기준) 선출직 공직자 당선자 당선인 중 자신의 개재 공약의 50%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당선인은 본 법안에 의해 처벌된다.

1. 처벌 대상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은 임기 종료일로부터 만 4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.
2. 처벌 대상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은 선거비용환수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② (자료수집) 본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가는 관련 기관을 설립, 지정한다.

1.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의 공약 및 실천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.
2.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의 공약 이행률의 계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홍보물에 본 법안 제 2항의 공약 이행률을 기재한다.

④ 추후에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03

처벌기준



Q: 처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?

선출직 공직자는 공약 중 50% 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된다.



04
기준



84% 이행률

05
처벌강도



Q: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?

- 4년간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**피선거권 박탈**
- **선거비용환수를 무효로 함**
- 선거홍보물에 **공약 이행률 수록**



06

자료수집



Q: 공약이행률 자료는 어떻게 수집합니까?

중립적 기관인 **선거관리위원회**에 위임한다



수정안

제19조(피선거권이 없는 자)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
1. 제18조(선거권이 없는 자)제1항제1호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
4. 제 263조(공약이행촉진법)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 중 공약 이행률이 50%에 미치지 못하는 자

법안 기대효과

정치인이 공약을 경시하는 사태 막음

공약에 대해 신뢰성을 줌

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높임

